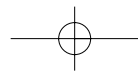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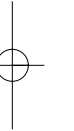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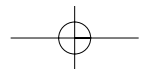
6월민주항쟁 20주년 기념

6월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제정을 위한 공청회

|주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

|주최 6월민주항쟁20년사업추진위원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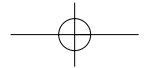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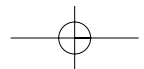
〈식순〉

개회식 (15:00~15:30)
 인사말 김병오(6월민주항쟁20년사업추진위원회 상임공동대표)
 경과보고 권형택(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념관추진팀장)

공청회 (15:30~17:00)

- 사 회 안병욱(가톨릭대 교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
- 발표1 6.10국가기념일 제정의 의의
 - 정해구(성공회대 교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장)
- 발표2 '87항쟁' : 6월민주항쟁과 7-8월노동자대투쟁의
 통합적 계승과 기념방안의 모색
 - 박석운(전국민중연대 집행위원장)
- 토 론 장영달(열린우리당 의원), 원희룡(한나라당 의원)
 노회찬(민주노동당 의원), 손봉숙(민주당 의원)





6월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제정을 촉구하며

30년 군사독재 시대를 마감하고 우리 사회가 민주화의 길에 접어드는 분수령이었던 87년 6월민주항쟁. 그로부터 꼭 20년이 흘렀습니다.

암울했던 80년대를 넘어선 87년 6월의 함성은 우리 민족에게 민주주의와 민족통일, 정의와 평화를 향해 나아가는 나팔 소리였으며, 새로운 세상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준 고고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6월은 우리에게 좌절의 아픔을 떠올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많게는 전국의 36개에 이르는 시군에서 500만이 넘는 국민이 “독재타도, 민주쟁취”를 외쳐, 3.1운동 이후 가장 많이 참여한 시민혁명이 있음에도 우리들이 원했던 결과에 이르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자유권의 확장이란 면에서 6월항쟁 이후 한국은 세계에 당당히 내놓을만한 높은 수준의 민주화를 실현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내용적인 민주주의에 다가서고 있지 못한 것 또한 엄연한 현실입니다.

20년의 세월을 보낸 6월을 맞이하며 우리는 지금 그 날을 어떻게 기억하며, 아직 실현되지 못한 그날의 꿈을 어떻게 실현할 할 것인가 숙제를 풀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독재의 과거, 그리고 민주화 투쟁의 과거를 어떻게 '살아있는 현재'로 만들 것인가 하는 과제는 6월이 품었던 꿈을 우리들이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독재와 억압, 민주주의를 향한 투쟁의 '기억'을 새로운 세대에게 물려줄 것인가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온몸을 바쳤던 정신을 기억하고 전승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근간을 바로 세워 보다 나은 미래로 가는 첩경이라는 점에서 6월 민주항쟁일은 마땅히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어야 하며, 마찬가지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국가적인 기념공간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6월10일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숙제에 대한 해답의 하나입니다. 물론 이것으로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권위주의체제를 종식하고 민주화를 가져왔던 범국민적 민주항쟁인 6월항쟁을 국가차원에서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충분함을 넘어서는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미 민주화운동 과정의 주요 사건인 4.19와 5.18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자면 아직까지 6.10이 국가기념일이 아니라는 사실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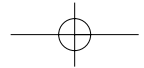
스무 해를 맞이하는 6월항쟁을 국가기념일로 만드는 것을 계기로 우리는 민주주의를 향한 도전과 성취 모두가 국민적 자부심으로 승화되는 6월을 향해 다시 한 번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길에서 우리는 나은 미래를 꿈꾸는 모든 이들의 가슴에 담겨있는 6월 정신을 확인하고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창조적인 힘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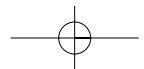
6월을 함께 나눴던 모든 분들께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귀한 말씀을 해주실 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20년 전 6월, 명동성당 농성투쟁 당시 한 시민이 보낸 쪽지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며 인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나의 형제 자매들에게 몸은 함께 하지 못하나 마음만은 당신들과 함께 합니다. 당신과 같이 피를 흘리지 못하나 눈물만은 함께 흘립니다.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나는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당신들은 진정 우리의 '희망'이라고”

2007년 1월 11일
6월민주항쟁20년사업추진위원회 상임공동대표 김병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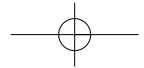
6·10국가기념일 제정 청원운동 추진경과

- 2006년 2월 28일 (사)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이하 6월계승사업회) 제4차 정기총회에서 '6월민주항쟁20년기념사업과 국가기념일제정을 위한범국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결의
- 2006년 6월 9일 6월민주항쟁 19주년 기념 대통령 만찬에서 6월계승사업회 임원진은 6.10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해 줄 것을 대통령께 요청
- 2006년 6월 15일 6월계승사업회에서 '6.10국가기념일제정청원서'를 행정부에 제출
- 2006년 10월 국가기념일제정청원운동에 대한 설명과 협조요청을 위한 지역설명회를 진행
: 마산, 부산, 대구, 광주, 전주, 청주
- 2006년 10월 25일 국가기념일제정추구를 위한 국회의원면담 진행
: 김상근, 함세웅, 김병오, 권형택, 김용태, 박형규, 백낙청, 김근태, 이목희, 우원식, 우상호, 이인영 참석
당에서 발의하고 해당상임위를 거쳐 본회의 결의를 통해 정부에 요구하기로 논의
- 2006년 11월 15일 이인영 의원 발의로 '6.10 민주항쟁 기념일' 지정 촉구결의안 서명에 들어감
- 2006년 11월 23일 부산지역 간담회 개최
: 6.15공준위대표, 민중연대대표, 여성연합대표, 시민연대대표, 지역원로, 개별인사 포함 23명 참석
6.10국가기념일제정청원운동을 진행하기로 결의

- 2006년 11월 29일 원로 민주인사 간담회 개최
: 6월계승사업회 고문단 및 각계 원로인사 15명 참석
6.10국가기념일 제정에 공감, 청원서명
- 2006년 12월 6일 6월민주항쟁20년사업과 국가기념일제정을 위한 조직위원회(약칭 '6월민주항쟁20년사업추진위원회')결성을 위한 준비회의 개최
: 지역 부문별 집행책임자 30여명이 참석하여 위원회 산하에 '국가기념일제정특별위원회'를 두고 적극 추진하기로 결의
- 2006년 12월 8일 광주지역 간담회 개최
: 시민단체대표자, 6월항쟁관련자 등 34명 참석
광주 전남지역 원로급인사 100인 청원서명 받기로 결의

이인영 의원실에서 발의한 '6.10 민주항쟁기념일지정촉구 결의안'에 국회의원 125명이 서명하여 12월 8일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안, 12월 12일에 회부됨. 2007년 2월에 소집될 예정인 임시국회 상정을 기다리고 있음
- 2006년 12월 19일 대전지역 간담회 개최
: 시민사회단체대표자, 6월항쟁관련자 등 21명 참석
대전충남 70인, 충북30인 총 100인 청원서명 결의

○ 서울과 경남지역 민주인사들의 청원서명이 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로 수렴, 부산, 광주전남, 대전충남, 충북청주, 전주전북지역에서 청원서명 마무리하여 6월사업회로 총화 됨.



발표 1

6.10국가기념일 제정의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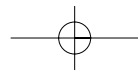
정 해 구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장)

1. 들어가며 — 민주주의 경험과 정신의 헌법적 반영

영국의 저명한 역사학자인 홉스봄(Eric Hobsbawm)은 18세기 말에서부터 19세기 전반기에 이루어졌던 영국의 산업혁명과 1789년부터 시작된 프랑스대혁명을 이후 근대사회 형성의 원형적인 틀을 제공한 ‘이중혁명’으로 설명하고 있다. 전자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근대 자본주의의 원형을 제공한 것이라면, 후자는 근대 민주주의의 원형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의 절대군주체제를 종료시키고 군주의 국가가 아니라 국민의 국가로서 프랑스를 다시 탄생시켰던 프랑스대혁명은 지금도 그 내용이 자주 인용되고 프랑스 인권선언(‘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을 남겼다. 프랑스대혁명을 상징하는 바스티유감옥의 습격(1789년 7월 14일)에 뒤이어 8월 26일 국민의회에서 채택된 17개항의 프랑스 인권선언은 인간과 국민의 제 권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다.

제1조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



제2조 모든 정치적 결합의 목적은 인간의 양도할 수 없는 자연권의 보존에 있다……
한편, 프랑스대혁명에 조금 앞선 시기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배와 과세정책에 저항, 독립전쟁을 전개했다.
그 과정에서 미국은 1776년 7월 4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독립선언문을 채택했다.

“…… 모든 사람은 나면서부터 평등하고 조물주는 인간에게 몇 가지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하였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는 것은 자명한 진리이다.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류는 정부를 조직하였으며,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피치자의 동의로부터 유래한다……”

이처럼 프랑스대혁명이나 미국의 독립전쟁은 절대군주 또는 식민모국에 대항하여 군주나 식민모국의 나
라가 아닌, 시민 스스로가 주인이 되는 근대 민주국가로서 새로운 공화국을 건설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채택되었던 인권선언이나 독립선언은 양도할 수 없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가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정부
의 조직은 이 같은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이처럼 혁명과 독립전쟁을 통해 근대 민주
국가를 아래로부터 새롭게 건립했던 이 두 나라에서, 나아가 이를 본받은 다수의 근대 민주국가에서 인간
의 기본적 권리와 이에 근거한 정부 조직의 정당성에 대한 이 같은 정신은 이후 근대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가치가 되었다.

6·10국가기념일 제정과 관련하여 이처럼 프랑스대혁명과 미국의 독립전쟁 그리고 그 과정에서 채택된
인권선언이나 독립선언을 언급하는 것은 근대 민주국가의 등장 과정에서 그것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역
사적 경험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한편 그것을 통해 만들어졌던 근대 민주주의의 정신이 어떻게 기억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해보기 위해서이다. 그렇다면 근대 민주국가로서 대한민국 건립의 역사적 경험은
무엇이었고, 민주공화국으로서의 그 정신, 특히 그 민주주의 정신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우선 우리
헌법의 전문에서 확인해볼 수 있을 것이다.

“…… 우리 대한민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
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
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

1987년 개정된 헌법의 전문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위
에서 건립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따라서 이에 의한다면 대한민국 등장의 역사적 계기는 3·1운동과 대한
민국임시정부의 건립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헌법전문은 대한민국이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
승”하고 있으며,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 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 이에 의한다면
대한민국이 계승하고 있고 또 지향해야 할 정신은 4·19민주이념 그리고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 국민생
활의 균등한 향상,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 등의 정신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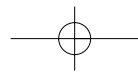
그러나 위와 같은 헌법전문이 근대 민주국가로서의 대한민국 건립과 전개에 역사적 경험을 충분히 반영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민주주의 정신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그것은 헌법전문이 근대 민
주국가로서의 대한민국 건립과 전개에 역사적 경험과 그 민주주의 정신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한 것
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즉 위의 헌법전문은 4·19민주이념과 민주개혁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우리
스스로 한국 민주주의의 초석을 세운, 1960년 4월혁명으로부터 시작되어 1980년 광주민주항쟁을 거쳐
1987년 6월민주항쟁을 통해 이룩된 민주화운동의 경험과 그 정신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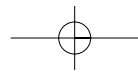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근대 민주국가의 등장과 발전에 있어, 특히
그 골격이 잡히고 그 틀이 세워졌던 초기 과정에서 4월혁명으로부터 6월항쟁에 이르는 민주화의 역사적
경험과 그 정신을 제대로 언급하지 않고 과연 한국 민주주의의 헌법 정신을 제대로 논할 수 있는 것인가?
더구나 프랑스대혁명의 정신이 그 인권선언을 통해, 그리고 미국 독립전쟁의 정신이 그 독립선언을 통해
즉각 반영된 것에 비해, 1987년 6월항쟁의 결과로서 등장한 1987년 개정헌법의 전문이 이 같은 민주화운
동의 경험과 정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2. 한국의 근현대 민주주의 역사 속에서의 6월민주항쟁의 의미

이처럼 한국 민주화운동의 경험과 정신이 헌법의 정신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한국 민
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새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지적할 필요가 있는 것은 한국
민주주의 시작과 전개는 그것에 매우 부정적이었던 한국 근현대의 역사적 환경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다. 이에 대해 필자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 베링턴 무어가 언급했던 부르주아 민주주의와 파시즘 그리고 국가사회주의 경로 이외에 이들과는 다





른 근현대 역사이행의 다른 경로는 없었던 것일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들 경로 이외에도 근현대 역사 이행의 제3세계적 경로가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즉 근대 이행에 뒤늦은 제3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은 자체적으로 자본주의적 산업화와 시민혁명의 근대적 과제를 수행하지 못한 가운데 제국주의 강대국의 식민지배를 받지 않을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독립 후에도 그들은 뒤늦은 근대적 국가형성과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 등의 근대적 과제들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었지만, 그것 역시 독립 후 강하게 구축된 권위주의체제 속에서 시도되어야 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제국주의의 식민지배를 거쳐 독립 후 권위주의체제의 지배 속에서 민주화를 추구했던 제3세계적 경로를 위의 세 경로 이외에 제4의 근현대 역사 이행의 경로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6월민주항쟁과 한국 민주주의 현주소』, 6월민주항쟁 19주년 기념심포지움 자료집, 2006.6.29, 9쪽).

즉 근현대 역사 이행에 있어 제4의 이행 경로를 밟은 나라들의 경우 근대적 민주주의의 구축은 매우 척박한 역사적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것은 자생적인 근대 이행을 이루지 못한 가운데 제국주의의 식민지배 속에서 타율적인 근대 진입이 이루어졌고, 독립 후에도 권위주의체제의 등장 속에서 민주주의가 시작되고 구축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이다. 한국 역시 그 예외가 아니었다. 오히려 일제의 식민지배, 해방 후의 분단과 전쟁, 그리고 반공과 개발 독재 등의 경험을 가졌던 한국의 경우 근대적 민주주의의 구축은 그 누구보다도 더욱 불리한 역사적 환경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여하튼, 한국 민주주의 출발의 본격적인 계기는 일제 식민지배로부터의 해방 후 국제적 냉전의 전개 속에서 남한에 그 군대를 진주시킨 미국에 의해 주어졌다. 즉 미국은 미군정을 통해 남한에 미국식 민주주의의 제도와 형식을 부여했는데, 한국의 민주주의는 일단 이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외부로부터 도입되고 위로부터 부과된 민주주의는 쉽게 정착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와의 대치 속에서 강화되었던 국제적 냉전의 와중에서 발생했던 남북 분단과 전쟁의 경험은 한국사회에 강력한 반공주의의 이데올로기를 부과했다. 따라서 이 같은 여건 속에서 한국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하고 작동하기란 쉽지 않았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상과 같은 부정적 여건과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한국전쟁 이후 한국 민주주의는 반독재 민주화운동을 거치면서 부단히 발전하였다는 점이다. 즉 해방 후 위로부터 주어졌던 한국의 민주주의는 1960년의 4·19혁명을 통해 아래로부터의 민주화운동으로 전환되었고, 이후 민주화운동은 1960·70년대에 걸쳐 박정희 개발독재에 대한 지속적인 저항을 통해, 나아가 1980년대에 광주항쟁에 대한 유혈진압을 통해 등장한 5공화국 독재에 대한 격렬한 저항을 통해 전개되고 강화될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1987년 민주화 요구의 범국민적 항쟁이었던 6월민주항쟁으로까지 이어졌는데, 그것은 마침내 권위주의체제의 민주화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물론 6월민주항쟁에 의한 권위주의체제의 민주화가 한국 민주주의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란 원래 그 의미상 특정 기간 동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진전을 도모하는 과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6월항쟁을 통한 권위주의체제의 민주화는 어떤 점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민주주의 출발에 해당할 뿐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민주화 과정에서 치루어졌던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세력이 패배함으로써 그것이 보수적 민주화로 귀결되었다는 점에서 권위주의체제의 민주화의 효과는 제한적이기조차 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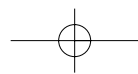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민주항쟁과 이를 통한 권위주의체제의 민주화는 한국 민주주의 전개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한국에 근대적 민주주의의 제도와 형식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냉전과 권위주의 체제에 의해 그 정상적인 작동이 지체되고 왜곡되었던 상황에서, 6월항쟁을 통한 권위주의체제의 민주화는 그러한 지체와 왜곡을 중단시키고 한국 민주주의의 정상적인 작동을 가능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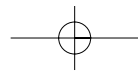
한편 아래로부터 전개되었던 민주화운동과 그 연장선상에서 발생했던 6월항쟁은 한국 민주주의의 정신을 새롭게 형성시켰다. 이를테면, 한국 민주화운동의 본격적인 출발이라 할 수 있었던 4·19혁명은 이승만 독재정권의 선거부정에 대해 시민적 저항의 정신을 보여주었고, 전국에 걸쳐 수백만 명에 이르는 시민들이 참여함으로써 민주화 요구의 국민적 항쟁이 되었던 6월항쟁은 국민에 의한 정부 선출권을 되찾게 함으로써 주권재민원칙을 새삼 확인시켜주었다. 또한 독재권력의 인권 탄압에 저항해왔던 민주화운동은 인권의식을 일깨웠고, 특히 광주민중항쟁은 특정 군부세력에 의해 탈취된 국가권력에 의해 무참히 짓밟혔던 인간 존엄성을 위한 저항의 정신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요컨대, 한국 민주주의 전개에 있어, 특히 그 틀과 정신이 형성되고 그것이 정착되는 초기 과정에서 민주화운동과 그 연장선상에서 발생했던 6월민주항쟁은 민주주의의 구축에 부정적이었던 한국 근현대의 역사적 환경 속에서 그 동안 거꾸로 세워졌던 한국 민주주의를 올바르게 다시 세우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

3. 국가기념의 대상으로서의 민주화운동과 6·10국가기념일 제정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주화운동과 그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6월민주항쟁은 한국 민주주의의 전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이 같은 운동과 항쟁이 한국 민주주의 초기과정에서 거꾸로 세워졌던 한국 민주주의를 바로 세웠기 때문이다. 따라서 권위주의체제의 민주화가 이루어진 새로운 상황에서 민주화운동과 6월항쟁은 당연히 국가기념의 대상이 되어야 했다. 국가가 자신의 역사와 사회를





대표한다면 그 역사와 사회의 의미있는 경험과 정신은 국가의 이름으로 기념되고 기억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 민주주의 역사 속에서 민주화운동과 6월항쟁이 갖는 그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1987년 개정헌법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그 의미는 헌법 정신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못하다.

필자는 1960년의 4·19혁명으로부터 본격 시작되었던 민주화운동과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던 1987년의 6월항쟁이 사실 한국 민주주의 초기 내용을 정초했다는 점에서 그 경험과 정신은 헌법 정신에까지 반영되어야 한다고 본다.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 있어 그것은 그럴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6월항쟁의 결과로서 탄생한 1987년의 헌법조차 그것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물론 1987년의 헌법전문이 4·19민주이념의 계승과 민주개혁의 사명을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러한 언급만으로 한국 민주화운동과 6월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표현하기에는 너무 약하다. 따라서 언젠가 헌법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우리는 한국 민주주의의 초기 내용을 정초했고 거꾸로 세워졌던 한국 민주주의 올바른 다시 세웠던 민주화운동과 6월항쟁의 경험과 정신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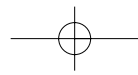
다른 한편, 민주화운동과 6월민주항쟁은 다른 방식으로도 국가에 의해 기념될 필요가 있다. 우선 4·19혁명과 광주민중항쟁은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어 기념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에 의해 그 경험과 정신이 기념되고 있다. 반면 6월항쟁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 민간 차원의 기념은 있을망정 국가에 의한 기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설립을 통해 민주화운동 전체가 포괄적으로 기념되는 가운데 6월항쟁도 그 일환으로 기념되고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그러한 기념에서 6월항쟁의 의미와 그 역사적 중요성은 과소평가되지 않을 수 없다.

이 같은 현실에서 6월민주항쟁은 국가에 의해 어떻게 기념되어야 하며, 또한 우리는 국가에 의한 그 수용을 어떻게 요구해야 하는가?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우선 민주화운동의 전체 과정에서 6월항쟁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과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4·19혁명과 광주민중항쟁 그리고 6월항쟁은 민주화운동 전체를 잇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주요 사건들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연결에서 4·19혁명은 그 첫 출발로서의 의미를, 6월항쟁은 그 마무리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중간에 위치해있는 광주민중항쟁은 민주화운동을 더욱 심화시키고 발전시킨 사건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그런 연속선의 관점에서 볼 때, 마침내 권위주의체제의 민주화를 이루어냈던 6월항쟁은 민주화운동의 최고의 절정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나는 6월민주항쟁이 민주화운동의 그 어느 사건보다 중요하게 인식되고 기념될 필요가 있으며, 그 기념은 최소한 다음과 같은 두 방법에 의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다. 첫째는 6월항쟁 발생의 첫 날인 6월 10일을 일단 국가기념일로 제정하는 일이다. 오히려 그것은 4·19혁명과 광주민중항쟁이 이미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매우 뒤쳐진 일이기도 하다. 나아가, 민주화운동 전체의 위치 속에서 6월항쟁이 갖는 의미를 고려할 때, 그것은 언젠가 국가기념일이 아니라 국가에 의해 경축되는 국경일로 승격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는 민주화운동과 그 정점으로서의 6월항쟁을 기념하기 위해 전국적인 차원의 민주화운동기념관 또는 민주주의전당을 건립하는 일이다. 이미 일제 식민지배 하에서의 독립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독립기념관이 건립된지(1987년) 오래고, 한국전쟁을 기념하기 위해 전쟁기념관을 건립한지(1994년) 상당한 기간이 흘렀다. 이들과 비교하여 민주화운동과 6월항쟁을 기념할 민주화운동기념관 또는 민주주의전당의 건립이 덜 중요하게 간주될 이유는 없다. 따라서 민주화운동기념관 또는 민주주의전당의 건립이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된다.

그런 점에서 6월민주항쟁 20주년이 되는 지금 우리가 그 실현을 위해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은 6·10국가기념일 제정과 민주화운동기념관 또는 민주주의전당 건립의 결정이다.



발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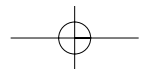
‘87항쟁’ : 6월민주항쟁과 7-8월노동자대투쟁의 통합적 계승과 기념 방안의 모색

박 석 운 (전국민중연대 집행위원장)

1. ‘6월민주항쟁’과 ‘7-9월 노동자대투쟁’

○ 6월민주항쟁

- 6월민주항쟁은 ‘87년항쟁’의 시작이자 중심을 이루는 항쟁이며, 지난 20년간 사회적으로 87년 투쟁의 대표명사로 불리워진 역사적 근거를 지니고 있다.
- 6월민주항쟁은 한국민주화운동의 기념비적 항쟁이다. 이는 △6월민주항쟁이 한국사회 전체 민주화운동진영의 조직적 참여와 지도를 통해 이루어진 항쟁이라는 점 △5월항쟁이후 끈질기게 진행되어 온 민주화운동의 역량이 총결집된 결과, 군사독재정권에 반대하는 범국민적 참여를 통해 진행된 항쟁이라는 점 △사실상 군사독재체제의 붕괴를 촉발하는 결정적 계기가 된 항쟁이라는 점 △6월민주항쟁의 결과 각종 부문의 실질적 민주화를 촉발시키고, 한국사회의 민주주의가 한단계 더 성숙되는 결정적 계기를 만들 수 있었다는 점 등에 의해 뒷받침 된다.



○ 7-8월 노동자대투쟁

- '7-8월 노동자대투쟁'은 대중적 '민주노조운동'의 출발점이었다. 당시까지 전근대적이고 병영식 통제 방식으로 짓눌려 왔던 노동현장, 가장 억압받던 영역이었던 노동현장에서의 민주화 요구는 절차적, 형식적 민주화를 넘어서서 우리사회를 실질적으로 민주화시키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런 점에서 7-8월 노동대투쟁은 '6월민주항쟁'의 역사적 계승자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 이 점은 6월민주항쟁의 성과에 힘입어서, 또 6월민주항쟁에 연이어서 진행된 대투쟁이었다는 역사적 진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분명하다고 하겠다.
- 그러나 사회적으로 '7-9월 노동자 대투쟁'은 6월민주항쟁과 분절적으로 파악된 결과, 그 역사적 의미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못하고 그 지위도 확립되어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또 그 결과 7-8월 노동자대투쟁을 열어제치는 기틀이 되었고, 그리하여 실질적 민주화를 추동하는데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6월민주항쟁의 역사적 의미마저 반감시키는 아쉬움이 있었다.

○ 87년대항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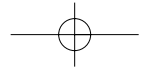
- 87년대항쟁은 87년 '6월민주항쟁'과 잇달아 진행된 '7-8월 노동자대투쟁'의 민주적이고 변혁적인 투쟁을 통합적으로 파악하는 개념이다.
- 이는 △87년 민주화투쟁의 지향점이 군사독재정권에 맞서 정치적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것과 함께, 군사독재체제 아래서 고통 받은 노동자·민중들의 권리회복을 비롯한 각계각층, 각 분야의 실질적 민주화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 △주체의 측면에서도 '6월민주항쟁'에 학생과 재야세력만이 아니라 화이트칼라 노동자를 비롯하여 수도권 지역과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블루칼라 노동자와 농민, 도시서민 등 광범위한 민중들의 참여가 이루어졌다는 점 △'7-8월 노동자 대투쟁'이 '6월민주항쟁'에 이어 연속적으로 일어난 투쟁으로, '6.29선언' 이후에도 투쟁을 중단하지 않고 투쟁의 지속성을 유지하였고, 또 6월민주항쟁을 계승 발전시킨 투쟁이라는 점에서 필요한 개념이라고 하겠다.
- 즉 연이어 진행된 6월민주항쟁과 7-8월노동대투쟁을 통합적으로 파악하여 '87년대항쟁'으로 자리매김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 그러나 현 시점에서 아직까지 87년의 이 2가지 대항쟁이 통합적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공인될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연구성과가 축적되지 않고 있다는 현실적 조건이나, 또한 일반 국민들이나 언론에서도 87년의 대항쟁을 '6월민주항쟁'으로 통칭해 왔다는 역사성 등을 고려해 볼 때, 87년대항쟁을 '6월항쟁' 또는 '6월민주항쟁'으로 통칭하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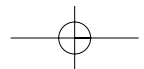
- 다만 '6월민주항쟁'의 역사적 의미 속에 7-8월 노동대투쟁의 의미까지 포괄적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6월민주항쟁의 역사적 진행과정에도 부합되고, 또 6월민주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보다 풍부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우선 '6월민주항쟁'의 명칭으로 기념과 계승을 시작하되, 향후 학문적·실증적 연구를 통해 87년에 연이어서 진행된 2개의 항쟁을 보다 통합적으로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밝힌다.

2. '6월민주항쟁'과 국가기념일 제정

○ 국가기념일의 제정의 의의

- 87년대항쟁 즉 87년민주민중항쟁은 우리사회의 본격적인 민주화의 첫걸음을 내딛게 한 역사적 사건이다. 5월항쟁을 직접 계승한 '6월민주항쟁'은 80년대에 본격적으로 전개된 민주, 민중운동의 정점에 있으며, 수십 년을 이어온 군부독재를 사실상 퇴진시키는 역사적 성과를 올림과 동시에, 민중적 단결의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 그러나 현재의 젊은 세대들은 6월항쟁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또 저 철벽과도 같았던 군사독재정권 시절 어떻게 인권이 유린되었고 민주주의가 압살되었는지 전혀 그 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 그 틈바구니를 뚫고, 군사독재 세력들과 그 부역세력들이 이 민주화의 열린 공간에서 다시금 준동해 나서고는, 그 수많은 열사와 투사들의 피와 눈물로 이룩된 그나마의 민주화의 성과조차 송두리째 날려 버리려 획책하고 있다.
- 이같은 역사적 의의는 '6월항쟁'을 통해 탄생한 현재의 헌법정신에 비추어도 국가적으로 기념할 만한 충분한 가치와 근거가 있다.
- 우리 근현대사에 있어 정의는 표면적으로는 항상 패배하는 양상을 보였고, 또 표면상 좌절의 역사로 점철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젊은 시절의 수많은 학도들이 그 역사에 상처받고 또 좌절해 오면서 정의가 승리하는 역사의 창출을 그 얼마나 염원해 왔던가를 생각하면, 우리 근현대 역사상 정의가 절반이나마 승리한 흔하지 않은 사례 중의 하나인 6월항쟁의 역사적 의미는 심대하다 아니할 수 없다.
- 나아가 지난 군사독재시절 온몸을 던져 헌신하였던 그 열렬한 민주화 투쟁의 의지를, 그 절절한 사연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사랑의 정신을 발굴해 내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의 마음의 양식으로 삼게 하는 일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역사적 과제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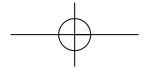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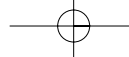
○ 기념일의 명칭

- 국가기념일의 명칭은 '6월항쟁'을 어떻게 개념 지을까 하는 문제와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다. 이미 지난 2003년에 개최된 6월항쟁 제16주년 기념토론회 때, 1987년에 연이어 진행된 2개의 대항쟁의 항쟁의 역사적인 맥락을 살리기 위해서는 6월항쟁을 '87항쟁'으로 규정하자는 제안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이 제안의 취지에서 살리는 의미에서는 '87년대항쟁'이라고 부르는 방안도 있다. 또 6월항쟁을 적극적 의미에서 '6월혁명'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 5월 항쟁의 맥을 이은 87년의 6월민주항쟁과 7-8월노동대투쟁이라는 두 가지 항쟁의 흐름을 하나의 대항쟁으로 통합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국민항쟁으로 승화시키는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특히 87년 이후 분화·발전되어 온, 시민사회운동과 노동민중운동의 흐름이 하나로 포괄되는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따라서 6월항쟁의 개념을 확장하여 7-8월노동대투쟁까지 포괄하여 파악한다는 6월항쟁의 확장된 개념은 1980년대의 변혁운동 이래 분화·발전되어 온 두 운동이 서로의 접점을 확인하고 새로운 연대와 통합의 지점을 모색해 나가는 당위성과 지향점을 제시하는 문제의식의 소산이기도 하다.
- 따라서 87년의 민주민중항쟁을 기억하고자 하는 기념일은 이 같은 점을 충분히 고려하고 반영하는 선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특히 기념일 제정을 행정적 주체가 아닌 사회운동사적·역사적 주체의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과거를 특정하여 기념한다는 의미를 넘어 이를 계승·발전시킨다는 차원에서 처음부터 미래지향적인 개념, 향후 발전할 수 있는 개념으로 정립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따라서 현 단계에서 개념적으로는 6월민주항쟁과 7-8월 노동대투쟁을 함께 아우르는 개념 설정이 중요하다고 보는 전제위에서, 국가기념일의 명칭은 지난 20년간 대중적으로 불려 왔던 역사성을 감안하여 '6월민주항쟁' 또는 '6월항쟁'으로 부르는 것이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본다. 물론 향후의 학문적·실증적 연구를 바탕으로 개념의 발전적 재정립이 진행된다면, 이를 바탕으로 향후 변경될 수도 있는 문제로 바라보아야 한다.
- 현재 상황은 5월민중항쟁을 5.18민주화운동기념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정치·사회적 한계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그러나 군사독재시절의 제도권의 공식 명칭이었던 '4.19의거'가 오늘날 '4.19혁명'으로 변화, 발전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지속적인 민주화투쟁과 그 성과로 얻은 사회민주화의 진전에 따른 것이었다. 따라서 6월항쟁의 개념 규정 또한 우리들의 지속적인 논의와 사회적 투쟁이 진행됨에 따라 향후 변화를 겪게 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본다.

○ 국가 기념을 넘어서는 사회적 기념과 계승

- 국가기념일 제정은 △6월10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한다는 성과를 넘어 87년 대항쟁의 역사적 개념을 올바르게 규정하는 공식적 논의의 출발점이라는 점 △국가기념일 제정을 계기로 80년대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정당성을 온전하게 확인해가는 사회적 노력을 결집하는 운동의 출발점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차대한 과제라고 하겠다.
- 이는 국가기념일 제정뿐만 아니라 20년을 기리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동일하다고 본다. 20주년 기념사업은 △87년 6월항쟁을 바르게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한 '기억투쟁'의 주체를 보다 민중적으로 설정하고 △실질적인 민주주의로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해야 한다고 본다.
- 이같은 관점과 태도는 곧 87년의 민주민중항쟁 정신을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부활시키는 첩경이 될 것이다.





민주화운동기념관준비위원회가
한국민주주의전당건립 범국민추진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새롭게 출발하였습니다.

www.kdemocracy.or.kr

민족을 넘어 인류의 희망을 채우는 민주·평화·통일의 샘터

한국민주주의전당

한국민주주의전당과 함께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인이 되십시오



한국민주주의전당은 과거-현재-미래를 관통하여 쉼 없이 나아가는 민주주의 꿈을 실현하는 곳이며, 삶의 영역에서 민주주의를 뿌리내리는 아름다운 열정이 가득한 곳입니다.

한국민주주의전당은 과거를 보여 주는 시설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생활화하고 심화시키는 민주주의 교육과 체험활동, 국제교류와 지원 활동이 이루어지는 내일의 민주주의 샘터가 되고자 합니다.

한국민주주의전당은 민주화를 이룩한 국민적·역사적 성취를 성찰하고 기념하는 민주화운동기념역사관, 청소년·시민을 대상으로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는 민주주의 교육센터, 민주주의와 인권을 통해 아시아 평화 구축에 기여하는 국제민주센터, 민주주의연구소·민주화운동사료관 등으로 구성될 것입니다.

한국민주주의전당을 만들어가는 추진위원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한국민주주의전당건립 범국민추진위원회

주소 | (100-785) 서울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B동 1층 전화 | 02-3709-7555 전송 | 02-3709-7540
전자우편 | memorial@kdemo.or.kr 온라인 가입 | http://www.kdemocracy.or.kr 또는 http://mincho.hani.co.kr

